

한나라당 압승 '뇌사상태에 빠진 지방자치'

8 민주노총 | © 승인 2006.05.31 12:17

한나라당 싹쓸이, 열우당 참패, 민주노동당 약진

[표시작]■ 민주노동당 당선자 명단
(최종/총81명-이중 민주노총후보 당선자=34명)

울산 북구 광역의원 윤종오

울산 동구 광역의원 이은주, 이재현

제주 17선거구 광역의원 안동우

경남 거제 광역의원 김해연

경기 과천 기초의원 황순식

경기 평택 기초의원 김기성

경기 성남 기초의원 최성은

경기 남양주 기초의원 김학서

경기 안산 기초의원 홍연아

경기 하남 기초의원 홍미라, 이현심

경남 거제 기초의원 이상문, 한기수, 이행규

경남 사천 기초의원 제갑생

경남 하동 기초의원 이홍곤

경남 창원 기초의원 이종수, 이종엽

경남 마산 기초의원 송순호

경남 김해 기초의원 배병돌

경북 포항 기초의원 박경열, 복덕규

광주 광산 기초의원 국강현, 홍순희, 김도훈, 최경미

광주 북구 기초의원 김상훈, 이승희

광주 서구 기초의원 조남일, 강은미

서울 강북 기초의원 최 선

서울 관악 기초의원 이동영

울산 동구 기초의원 박대용, 서영택, 박문옥

울산 북구 기초의원 이은영, 류인목, 박병석

울산 중구 기초의원 권순정, 황세영

울산 남구 기초의원 김만현, 박성진, 조남애

인천 남구 기초의원 문영미

인천 부평 기초의원 전현준

전남 영암 기초의원 이보라미

전남 목포 기초의원 허정민

전남 순천 기초의원 신화철

전북 군산 기초의원 서동완

전북 전주 기초의원 서윤근

전북 전주 기초의원 양용모

전북 정읍 기초의원 이병태

전북 익산 기초의원 오기주, 임병술

충남 아산 기초의원 임광웅

충북 옥천 기초의원 박한범

강원 광역비례 최원자

경기 광역비례 송영주

경남 광역비례 김미영

경북 광역비례 김숙향

부산 광역비례 김영희

서울 광역비례 이수정

울산 광역비례 이현숙

전남 광역비례 고송자

전북 광역비례 오은미

제주 광역비례 김혜자

경기 수원 기초비례 윤경선

경기 성남 기초비례 김현경

경남 창원 기초비례 정영주

경남 마산 기초비례 이옥선

경남 진주 기초비례 강민아

경남 거제 기초비례 박명옥

경남 사천 기초비례 이정희

경남 합천 기초비례 박현주

경북 경주 기초비례 이종표

울산 중구 기초비례 홍인수

울산 남구 기초비례 강혜련

전북 전주 기초비례 오현숙

전북 군산 기초비례 채옥경

전북 익산 기초비례 김은숙

(△자료제공=민주노동당)[표끝]

[종합] 한나라당 싹쓸이, 열우당 참패, 민주노동당 약진

민주노동당 4년전에 비해 당선자 60% 증가, 정당지지율 12p로 상승

민주노총 출신 당선자 전체의 41.9% 차지

정당간판 우선, 지역연고에 빠진 지자체 '뇌사상태'

진보진영 총단결로 하반기 돌파 '이구동성'

부패야당과 무능여당의 진흙탕 선거투기는 결국 정책을 외면한 감성선거로 그 막을 내렸다. 투표가 마감되고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이 시각, 한나라당 압승, 열린우리당 몰락, 민주노동당 정당지지도 상승 등의 다양한 표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엇갈린 표심과 함께 복잡하게 이어진 선거전쟁의 결말 앞에서 다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한나라당의 독주'가 예상되자 '싹쓸이만은 막아달라'며 당당하게 '구걸정치'에 빠져든 열린우리당을 보았다. 당연히 역사의 무덤에 묻혔어야 할 수구보수당의 화려한 부활과 그 위력을 보았다. 민주노동당은 예상밖 결과에 대해 크게 낙담하는 모습이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공식지지 선언하고 총력선거투쟁 전개

선거과정에서 민주노총은 지난 18일 "정치가 바로서야 노동자들의 살림살이가 펴진다"며 "국민의 아픔을 대변하는 참된 노동자, 농민, 서민의 정당, 민주노동당이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총력지원하고 총투표에 나서자"라며 민주노동당 공식지지를 선언하고 곧장 전국 현장순회 선거투쟁에 돌입했다. 선거 막바지에 이르러 민주노총은 조합원들에게 투표방침을 담은 '총투표 지침'을 발표하며 노동자와 서민대중들의 아픔을 풀어내기 위한 투표독려에 주력했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비판도 감추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권을 얼치기 개혁정부로 규정하고 "노 정권과 수구보수정당이 미국

식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눈이 뒤집혀 노동자, 농민, 서민을 외면해왔다"고 일침을 놓았다. 때문에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고 있는 한국 사회, 외세에 영합하고 민생을 파탄으로 내모는 정치와 경제를 근본적으로 바꿔내야 한다"며 "기어이 세상을 바꿔내야 하고 그러려면 노동자 민중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치세력, 진보정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약재에도 불구하고 정당지지도 소폭 상승

민주노동당은 이번 선거에서 정당지지도 15%, 의회진출 300명이라는 목표로 내세웠다. 여전히 지역주의에 매몰된 '한국식 정치환경'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환경에서 민주노동당은 선전했다. 정당지지도는 8%대에서 12%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4년전에 비해 61% 증가된 지방의회 의원들을 당선시켰다. 민주노동총 후보는 전체 당선자중 41.9%를 차지하고 있다. 작지만 큰 약진이다.

선거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은 "부패한 한나라당과 민중의 염원을 외면한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에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며 "한나라당 독주를 막고 수구집단의 공세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진보정당이 바로 민주노동당"이라고 한표를 호소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은 5월30일 서울에서의 마지막 유세에서 "열심히 일해도 10%만 잘사는 나라여서 화가 났다. 국회의원의 90%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다. 두 정당이 양극화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부패와 무능으로 얼룩진 현 정치풍토의 전면 개혁과 함께 그 주범인 보수양당의 퇴출을 거듭 주장하기도 했다.

중앙선관위는 과연 공정선거를 입에 달 수 있나

이번 제4차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중대선거구제와 함께 1인 6표제가 도입됐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제도시행에 따른 자세하고 친절 한 대국민 홍보를 하지 않았다. 결국 5월31일 중앙선관위 자유게시판 '나도한마디' 코너에는 중앙선관위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는 누리꾼들의 비판과 항의로 채워졌다.

민주노동총과 민주노동당 등이 나서서 새 제도시행에 따른 선거방법을 알리는 기현상까지 벌어졌다. 이들은 별도 대책을 수립하고 민주노동총 공식사이트에 중대선거구와 달라진 투표절차에 대한 홍보안내 코너를 급히 만들어 알리고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유권자들에게 투표방법을 알릴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을 유권자가 대신한 셈이다. 이 문제는 간단히 넘길 문제는 아니다.

중앙선관위의 대국민 선거홍보 모르쇠에 누리꾼들 비판 빗발쳐

민주노동총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누리꾼의 글을 보자.

유권자라는 필명을 사용한 누리꾼은 "오랫동안 선거에 참여해왔지만, 투표안내문같은 선거공보물이 없는 이런 선거는 처음"이라며 지적하고 "전국적으로 유권자의 권리행사와 참여기회를 제한시킨 것에 대한 의도적인 직무유기는 반드시 그 원인이 밝혀져야하고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투표안내문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기표소가 어딘지 몰라 아예 포기해버리게 만들었다"며 항의하고 "유권자가 알아야 할 최소한의 정보마저 배제시킨 선거가 무슨 민주선거며, 공명선거이나"라며 중앙선관위의 '모르쇠' 행태에 대한 분노를 쏟아냈다.

정책선거 외면, 실체없는 이벤트 선거의 귀재 한나라당+열린우리당

선거가 막판에 이를 수록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철인3종 경기에 버금가는 정치 이벤트에 주력했다. 정책은 왕따당하고 누가누가 철인경기를 잘 하느냐, 누가누가 밤잠을 더 안 자고 돌아다니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일부 언론들 역시 선거 막판 서울공화국 수장 등의 정치이벤트에 초점을 겨냥해 스포츠경기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떠다.

바로 그 시각, 민주노동총과 민주노동당은 전국 순회를 이어가며 사회쟁점화된 한미FTA문제, 사회양극화 문제, 최저임금문제, 정권과 자본 중심의 노사로드맵 강행 문제' 등의 기만성을 폭로하며 선거 이후 전면 투쟁을 예고하기도 했다.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선언 잇따르기도

민주노동당에 대한 각계각층 의견주도세력의 잇따른 지지선언도 눈여겨볼만 하다. 한나라당 광풍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당지지도 오르는 현상에 대한 일부 언론들이 집중보도하기도 했다.

30일 서울에서 열린 마지막 선거유세 현장 분위기를 살펴보자.

보수양당은 거의 철인3종경기라는 신종 정치이벤트를 대과없이(?) 마무리했다는 쪽에 안도의 한숨을 쉰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전태일 거리에 결집해 "열린우리당은 개혁을 배신하고 민생에는 무능하였으며 진보와 개혁을 향한 국민적 열망을 좌절시킨 우리당이 심판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비판했다.

당면 정세에 대해 "수구보수정당 한나라당의 득세로 진보와 개혁의 시대적 흐름이 위협받고 있으며 한나라당의 일당지배는 풀뿌리 지방자치에는 사망선고와 다를 없다"라며 우려했다. 이들은 "부패정당 한나라당이 지배하는 지방자치에서는 사회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실망과 분노가 크다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고 진보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힘을 다시 모아야 한다"며 마지막까지 사회적 문제를 언급했다.

2002년 6월 지방선거 vs 2006년 5월 지방선거

과연 지방자치 역사가 다시 쓰여지고 있는 걸까?

지난 2002년 6월13일 제3차 지방선거에 출마한 지방자치 후보들은 이구동성으로 '풀뿌리 후보들의 배출과 다시 쓰는 지방자치의 역사'를 주장했었다.

그 당시 '지방자치 개혁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10대 과제'가 발표됐었는데 △지역정치를 중앙정치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한 정치권의 각성 △기성 정치권의 음성적 정치자금 조성을 방지하기위한 정치자금제도 개혁 △토호세력과의 연계고리를 끊기 위한 기성 정당들의 자정노력 등 10가지였다. 이 쟁점들을 '중앙정치의 부속물로 간주되는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넘어야 할 산들'로 규정하기도 했다.

뇌사상태에 빠진 중앙정치의 부속물 지방자치

2006년 지자체의 몰골은 어떨까?

대부분 '중앙정치의 부속물이며 뇌사에 빠진 것'으로 비판한다.

4년전과 비교하면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도 지역고착화 현상이 확실하게 나타났다. 지역 토호세력과 연계된 특정 정당의 지방권력 독식 문제 역시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의 부속물로 전락된 양상 역시 그 전과 다를 바 없다. 또한 정책 중심이 아닌 정당 간판이 당락의 결정을 좌우하는 폐단도 이어지고 있다. 선거 막판에 지역 곳곳에서 금품살포 소동이 빚어지는 등 반자치적 악선거 유형인 금권선거도 발생했다.

정책대결이나 지역의제가 실종된 2006년 5.31 지방선거는 여전히 중앙정치에 매몰된 지방자치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특히 중앙정치의 부속으로 전락한 지방자치가 정당간판에 기대 정책의제를 외면함으로써 무절제한 선심성 공약, 헛공약이 남발되는 등 과거의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결국 그 모든 피해는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되돌아 온다는 점에서 국민의 정치적 민도 문제의 심각성은 재고찰되어야 하고 성숙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을 기획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보수언론의 파렴치한 편파보도, 대중의식 마비시켜

보수언론의 편파보도는 위력적이다.

서민대중의 희망을 철저히 외면한 채 특정 정당에 유리한 감성보도를 집중 배치해 유권자의 판단의식을 오도하거나 마비시켰다. '조중동의 괴력'이 유감없이 발휘된 5.31 선거다. 언론들은 이번 지자체 선거를 07년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으로 몰고 갔다. 한나라당의 정권심판론과 연결된 보도태도는 4년전과 똑같다.

과거처럼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는 기성정치권과 중앙정부의 기득권에 질식당한 상태'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잠시 2002년 6월 제3차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로 되돌아가자.

2002년 지자체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그 당시에도 "기성 정치권은 공천비리 잡음 등 구시대적인 후진적 정치관행을 바꾸지 않았

으며, 지역패권에 입각해 대통령선거를 대선 전초전으로 몰고 가려는 기성 정치권의 지방정치 무시 행위는 도가 지나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특히,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의 논리에 종속시키는 기성 정치권의 권력 독점적 발상은 기성정치권 스스로를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최대 걸림돌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빼놓지 않았었다.

2006년 지차제 선거 역시 4년전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이다. 07년 대선 바로 앞서 열리는 지자체 선거 정당간판에 의존하는 것에 머물고 있다는 것. 결국 지역의제는 실종된 채 중앙의 힘에 끌려다니면서 당선에만 혈안이 됐고 당선숫자만 늘리고 보자라는 '환상적인 공약' 남발에만 매몰됐다는 비판이다. 2006년 5월31일 4차 지방선거는 2002년 6월13일 지방선거의 복사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거의 '뇌사상태'에 빠진 지방자치의 현실은 결국 4년전처럼 '지방 토호와 반자치 인물들을 내세운 기성 정치권'때문에 '지방자치를 부패와 무능, 타락으로 밀어넣은 채 중앙정치의 부속물로 전락되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일용직 등 비정규노동자들 투표참여 어려워, 참정권 상실

일용직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참정권 문제도 다시 등장했다.

선거 참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인 이들은 실제로 투표에 참가할 수 없어 참정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을 수년전부터 제기해왔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전국건설산업연맹은 지난 4월 17일 건설노동자 참정권 보장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5월 23까지 약 한달여만에 1만 6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중앙선관위와 국가인권위에 전달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적 배려와 대책 수립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노동부는 "선거 등 공민권 행사를 위해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정하여 선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당연히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만 해석한다. 결국 노동자 문제는 노동자들이 사측과 협의해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때문에 5우러31일 선거당일, 일용직 종사자들은 하나같이 '사장만 투표하고 출근했다'며 '자신들은 회사에 출근해 일하느라 선거를 하지도 못했다'고 하소연한다.

부패하고 구조화된 풀뿌리 보수주의의 강고한 벽은 위력적이었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민중절망 심각

특히 노무현 정권을 세우며 열망한 '새 세상'에 대한 민중 소망은 절망 수준으로 추락했다. 또한 일부 정치적 의제에 대해 노 정권은 한나라당과 행동을 같이 하였으며, 자본권력 기득권집단의 지능적인 의제독점때문에 이들은 오늘날에도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진보진영의 총단결과 힘있는 투쟁을 통한 수구보수의 벽을 넘으려는 일관된 의지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는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돼 52년에 지방의원 선거가 실시됐다. 1956년 기초단체장 선거, 1960년 광역단체장 선거가 실시됐다. 1961년 박정희의 5.18 군사쿠데타 이후 지방자치는 사라진다. 이후 1980년 민주화 투쟁이 촉발됐고 그 여파로 9차 개정 헌법 제8장에 지방자치 조항이 부활했다. 1991년 지방의원 선거와 1995년 지방단체장 선거가 다시 실시됐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 중앙선대위는 31일 중앙당 4층 대회의실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개표상황을 점검한다. 천영세 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단, 최고위원 등 선대위원 전원, 김종철 서울시장 후보 등이 중앙당 상황실에서 개표방송을 지켜볼 예정이다.

지방선거 투표는 오늘(31일) 오전 6시부터 전국 만3천106개 투표소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오후 6시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을 전국 259개 개표소로 옮겨 철야 개표에 들어간다.

전체투표율 최종 51.3%

방송국 출구조사 '한나라당 광역시 싹쓸이, 민주노동당 정당지지도 13%'

민주노동당 4층 대회의실, 투표마감 전부터 이곳에는 개표 상황을 점검하는 상황실이 설치됐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를 비롯하여 천영세 민주노동당 선대위원장, 권영길, 노희찬, 심상정, 최영순 의원, 전농, 전빈련 의장 등과 출마후보들, 그리고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이 모여 개표 실황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지방선거 투표는 오늘(31일) 오전 6시부터 전국 만3천106개 투표소에서 진행되었으며, 오후 6시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을 전국 259개 개표소로 옮겨 철야 개표에 들어간다. 오후 6시 30분 현재 중앙선관위가 집계 중인 총투율은 48.7%이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후 6시경 민주노동당을 방문해 개표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조 위원장은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현장 조합원들이 진심으로 투표활동에 임했으며 이번 지방선거가 희망정치, 진보 정치의 진지 토대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지난 보름 동안의 전국 현장순회 투쟁 소회를 밝혔다.

각 방송은 오후 6시 투표가 종료되자 즉시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방송국 출구조사에 따르면 광역단체장은 '전북, 전남, 제주'를 제외한 전지역에서 한나라당이 '싹쓸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BC는 출구조사 결과를 밝히면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당지지도는 13%인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민주노총 kctu@nodong.org